

“제주항공 참사 1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끝나지 않아”

광주시민단체·유가족

1주기 앞두고 기자회견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과 광주 시민단체들이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국가 안전 체계 전면 강화를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월의 광주가 그랬듯 국민이 침묵한다면 진실은 또다시 묻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기자회견에 나선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1주기가 됐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광주·전남 시민사회를 향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동참을 호소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가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단 하나의 분명한 진실조차 쥐지 못했다”며 “다른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만난 결과 참사에는 ‘국가의 부재’라는 공통된 경험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이 겪고있는 비극은 2024년 12월29일에 멈춘 과거가 아니다. 지금 이순간도 비행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22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유가족·광주전남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스1

않도록,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뒤이어 회견에 나선 시민사회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참사가 잊혀지고 있다”며 “참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묻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한 시민사회도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또 “진실을 밝히는 일은 더 이상 유가

족만의 외로운 싸움이 돼선 안될 것”이라며 “진상규명은 늦지 않았다. 참사 1주기를 기해 본격적인 대책 기구를 구성해 유가족들과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향해 ▲독립적 진상규명 완수 ▲책임소재 규명과 엄벌 ▲재발방지책 마련과 국가안전체계 전면 강화 등 3가지를 촉구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이날부터 일주일

여 기간 동안 참사 1주기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분향소를 운영하는데 이어 오는 2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참사 1주기 광주·전남 추모대회를 연다.

또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는 28일부터 이들 동안 참사 1주기 추모의 밤을, 29일에는 참사 1주기 추모식을 거행한다.

/오권철 기자



22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 치러진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제주항공 참사·도서관 붕괴사고 시민분향소 운영

제주항공 참사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등 지역내 잇단 사회적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민분향소가 운영에 나섰다.

22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1층에서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시민분향소가 운영된다.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마련된 시민분향소는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의지와 사고 재발 방지 뜻이 담겼다.

특히 지역민 179명이 숨진 참사가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을 우려하면서 분향소를 구심점으로 한 시민들의 연대를 촉구한다.

같은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대표도서관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민분향소 운영에 나섰다.

분향소는 사고 11일 만에 마련됐다. 잇단 건설 현장 내 중대재해 예방,

법·제도 개선 요구를 담은 시민 추모 공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건설노조가 운영에 나섰다.

광주대표도서관 분향소 운영에 앞서서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방문해 합동 추모에 나서기도 했다. 유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추모객들을 향해 참사를 잊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 1주기가 되기도 전에 또다른 참사 현장 분향소에 오게 될 줄 몰랐다”며 “유족들의 위로가 충분히 되고 참사가 모두 해결(진상규명)될 때까지 함께해 달라. 잠깐의 애도가 아닌 같이 위로해주고 힘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붕괴사고 희생자 A씨의 동생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식 고취 차원에서 시민분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이라도 시민분향소를 통해 생각이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사회적 참사 유족들 “국가, 책임 주체보다 중재·관망 그쳐”

“국가 부재로 참사 완성” 정부 태도 비판 한 목소리

“재발 방지책, 22대 국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의 유족들과 관련 재난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회는 22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12·29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원탁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책임져야 할 국가의 부재와 부인’을 주제로 열렸다.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국가에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고 있는 사회적 참사 유족들을 중심으로,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 유족도 함께했다.

참여한 유족들은 저마다 겪은 사회적 참사의 경위와 후속 경과를 허심탄회하게 풀면서 공통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후속 경과를 발표하는 순서에서는 한 목소리로

‘국가는 불가항력적 요소 뒤에 숨는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순길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재난은 사고로 시작되지만 참사는 국가의 부재로 완성된다”며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들은 쉽게 공개되지 않았고 핵심적인 기록일수록 ‘확인할 수 없다’, ‘존재 여부를 말할 수 없다’는 말로 가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밝혀야 할 일들을 피해자들이 대신 입증해야 했다. 국가의 공식 발표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며 “(나아가) 피해자는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방해자라도 취급받았다”고도 토로했다.

이전의 광주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학동 참사와 제주항공 참사를 비교하며 “책임의 주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2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12·29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원탁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특히 유가족을 ‘설득의 대상’이나 ‘관리의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의 방관 횡수와 발언의 수는 많았지만, 정작 유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해 주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국가는 책임의 최종 주체가 되기보다는 갈등이 커지면 중재자로, 부담이 커지면 관망자로 물러났다. 국가가 재난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아닌 ‘관리하고 소모해야 할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재난·참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경구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22대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민규 기자

‘학원비 인상’ 놓고 광주 학원연합회·교육시민단체 대립

광주지역 학원 교습비 인상을 놓고 학원연합회와 교육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오후 2025년 제2차 교습비 조정위원회 회의를 갖고 교습비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학원연합회는 광주지역 교습비가 다른 광역시 교습비의 75% 수준에 불과하다며 초등 7.2%, 중등 7.3%, 고등 6.4%, 외국어 학원 13.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평균 6.6%(2019년 대비) 인상했으나, 당초 요구했던 10%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전적 상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이 이날 인상을 결정하면 동부교육지원청도 같은 인상을 적용

한다. 반면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지역 사교육 시장이 이미 과열된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학원비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3000원으로 2020년 대비 13만원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2020년 66.2%에서 2024년 78.2%로 높아졌다.

교육시민연대는 “교습비가 인상되면 소득에 따른 기회의 불균등과 가계 부채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2024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광주지역 사설학원 수는 2.5개로 전국 평균 1.8개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